

# 건설동향브리핑

## 제515호 (2015. 6. 15)

### ■ 정책 · 이슈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공사계약 분쟁 해결에 효율적

### ■ 경영 · 정보

- 사물인터넷, 스마트 건설 구현 기술로 주목

### ■ 경제 동향

- 1~4월 건설수주 전년 동기비 35.2% 증가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란 : 야구의 2군과 해외건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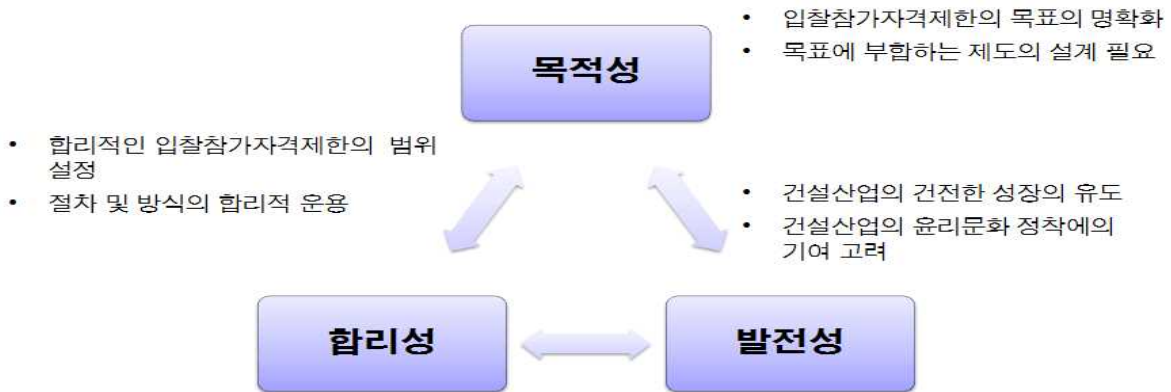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sup>1)</sup>

-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 위해선 목표 명확화 및 적용범위의 탄력적 조정 필요 -

### ■ 개선의 기본 방향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 가까운 처분으로, 법적 문제점이나 산업·경제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적으로는 현행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범죄 행위를 인정,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인 기업과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제기되어 왔음.
  - 산업·경제적으로는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산업의 속성 및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제도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제한성, 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 제도 운영의 목표 명확화

- 외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결국,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는 원인임.

1) 본고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회 합진규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2회로 게재하고 있음. 본고는 제도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2회차임.

-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운영을 계약이행능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특히, 입찰담합과 관련하여서는 과징금 중심의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보완적 또는 부수적인 제재로 활용해야 함.

## ■ 적용 범위의 탄력적 조정

-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적용범위의 광범위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범위를 제재의 사유가 된, 혹은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부문)에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업종(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등)이 사업 부문에 해당하므로 제재 사유가 된, 혹은 위반을 한 업종에 한정하여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음.
- 둘째, 모든 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효력을 제한하는 방안임.
  -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과 같이 제재 사유가 되거나 적발된 사업의 해당 발주기관에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각 법률에 따라 적용 대상기관을 한정하도록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셋째, 각 발주기관이 위반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발주기관이 그 판단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아울러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필요적 감면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외국과 같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기여도,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노력에 대하여 감면 및 유예를 검토할 수 있음.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공사계약 분쟁 해결에 효율적<sup>1)</sup>

- 사무국 설치 ·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활성화 필요 -

### ■ 공공공사 분쟁, 지속적 증가 추세

- 국내 공공공사 계약의 상당 부분이 예산 절감을 앞세운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부터 준공 이후까지 각 단계마다 발주처와 건설업체 간 이해 관계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입·낙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함. 이럴 경우 그동안 주로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하여 처리되어 왔음.
-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 대신에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내에도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의 한 종류인 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대표적인 장치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들 수 있음.
-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11월 설계변경,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분쟁 등으로 조정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조정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영국의 경우 2008~09년 동안 정부부처와 기관의 조정제도 이용이 314건이었고, 이 가운데 259건이 해결되어 분쟁해결 비율이 82%에 달함.

### ■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 먼저 조정위원회는 전문 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추진이 수동적·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8일 발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 조정 대상은 일부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공사 계약에 관한 분쟁 유형을 망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최소금액 규모를 공사계약의 경우 70억원으로 하고 있어 조정절차 이용이 사실상 상당 부분 제약당하고 있음.
- 발주자의 조정절차 참여 기피로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조정위원의 구성 비율에서도 정부위원이 민간위원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 개선 방안

- 첫째, 실효성 있는 상설기구화를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설치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건설시장의 환경변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 신청시 상대방의 조정절차 참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분쟁 사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사안의 발생 배경과 현장사정, 그리고 당사자 주장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계약조사관’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조정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정대상에 준할 정도로 확대하여 공공공사와 관련한 모든 갈등이나 분쟁 해결에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이의 및 분쟁조정 신청 등과 관련한 기간을 상당히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관련 채권의 제소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준공 후 6개월 정도까지는 허용하도록 하여야 함.
- 넷째,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다른 민간위원의 구성비율도 최소한 동일 수준 또는 민간위원의 수를 더 확대해야 함.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사물인터넷, 스마트 건설 구현 기술로 주목<sup>1)</sup>

- 에너지 소비 절감, 안전 감시 및 범죄 예방, 스마트 홈 시스템 실현 기대 -

### ■ 우리 생활에 가깝게 다가온 사물인터넷 시대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호 소통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
-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92.4%)이며, ‘사물인터넷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89.9%)으로 조사
  - 사물인터넷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아직 먼 얘기라는 주장에는 ‘그렇다’는 동의 의견(35.6%)보다 ‘그렇지 않다’(53.8%)고 보는 시각이 훨씬 우세
  - 전체 응답자의 65.3%가 ‘사물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답한 반면, ‘관심이 없는 편’이라는 소비자는 10.3%에 불과
  - 여성(61.3%)보다 남성(69.8%)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20대 60.8%, 30대 62%, 40대 66.4%, 50대 72%로 나타나 예상과는 달리 고연령층의 관심이 더 많은 특징을 보임.

### ■ 에너지 소비 절감, 안전 감시 및 범죄 예방, 스마트 홈 시스템 실현 기대

- 소비자들이 사물인터넷 시대를 통해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45.2%, 이하 중복응답), 실시간 안전 감시(44.4%),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체계적 건강관리(43.3%)를 꼽음.
  - 소비자들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범죄예방 시스템(54.5%, 중복응답)이었으며, 스마트 홈(47.8%)과 스마트 헬스케어(41.4%), 개인 건강관리(38.8%), 주차 가능 지역 실시간 안내(36.3%), 자동차 자동주행 시스템(34.5%) 등
-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중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1) 본고는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이 2014년 9월 전국의 만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트렌드 모니터 결과(trendmonitor.co.kr)를 토대로 작성함.

많이 알고 있는 서비스는 스마트 홈 시스템(63.7%, 이하 중복응답)이었음.

- 다음으로 스마트 위치와 구글 글래스와 같은 스마트폰 연동 정보습득 서비스(50.4%), 배송추적 시스템 등 운송 및 물류의 효율적 관리시스템(49.4%), 홈 네트워킹(46.4%) 순임.
- 개인, 가정, 산업, 공공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 범주별 사물인터넷 인식을 살펴본 결과, 사물인터넷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공공 분야(57.8%, 이하 중복응답), 가정(53.5%)과 개인(49.2%), 산업(34%) 순으로 응답
- 사물인터넷을 통한 지능형 공공 인프라 서비스가 공공 분야에 도입되어 대중의 건강과 안전성, 편의성 등의 향상에 기여 희망

## ■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물인터넷 시대

- 응답자의 84.1%가 사물인터넷으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데 동의할 만큼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물인터넷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컸음.
- 사물인터넷의 확산이 원치 않는 개인 정보 노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응답이 78.8%, 오히려 개인은 끊임없이 감시당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67.4%에 이르렀음.
- 우려가 클 것으로 조사된 사생활 침해, 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해당 상품의 상용화 이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

## ■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의 구현 기술로 발전시켜야

- 건설산업 차원에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의 구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사물인터넷은 사회 인프라 부족, 교통 체증, 재해 및 재난, 자원 고갈, 환경오염, 고령화시대 등 전 세계 각 국가, 지역,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 가능함.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차별화된 건설 상품을 개발하고 잠재된 효과를 실증하는 시범 사업을 국가 및 산업 차원에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김원태(연구위원 · wontkim@cerik.re.kr)

# 1~4월 건설수주 전년 동기비 35.2% 증가

- 민간 건축수주 호조세로 4개월 연속 증가,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 경신 -

## ■ 2015년 들어 4개월 연속 견조한 회복세

- 국내 건설수주는 2015년 1~4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 국내 건설수주는 2012년 8.3% 감소하고, 2013년 10.0%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감소해 2013년에는 91.3조원에 불과하였음.
  - 2014년 1/4~3/4분기까지 기저효과 및 민간 주택수주 회복의 영향으로 3분기 연속 증가함. 다만, 4/4분기에 4.9% 감소해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였음. 결국, 2014년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107.5조원으로 100조원대를 회복함.
  - 2015년 들어 건설수주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견조한 회복세를 보임.

## ■ 1~4월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2.5조원 기록, 전년 동기비 35.2% 증가

- 1~4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비 35.2% 증가한 42.5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4년 이후 매년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1~4월 수주 평균보다 대략 10조원 이상 높은 실적이며,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높았던 2007년 1~4월의 수주액인 33.7조원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임.

### <최근 국내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4년	1/4	35.4	78.1	107.1	25.5	15.9	27.8	7.2	-37.7	16.9	52.7	-9.2
	2/4	20.6	18.3	5.3	41.7	69.8	33.5	21.9	-10.5	29.6	48.1	7.5
	3/4	36.3	-4.2	5.4	-15.5	-5.8	-18.8	60.3	-21.2	73.2	98.6	42.1
	4/4	-4.9	-13.1	-8.9	-16.8	-9.8	-21.8	1.2	-9.1	3.7	10.6	-5.8
	연간	17.7	12.6	22.3	0.6	3.9	-1.0	21.0	-16.7	29.2	47.8	7.8
2015년	1월	32.7	-12.5	-10.7	-19.4	-54.6	-14.2	74.2	-59.7	94.5	75.7	141.5
	2월	4.0	-26.9	-28.3	-22.0	-72.9	-10.5	43.8	203.7	23.9	71.1	-14.7
	3월	88.4	0.7	7.7	-13.6	44.2	-27.6	184.5	296.7	176.2	342.0	16.6
	4월	19.0	7.1	3.5	18.6	78.6	-1.5	25.6	-63.3	41.0	26.6	70.1
	1~4월	35.2	-9.0	-8.6	-10.2	12.5	-15.6	74.9	34.0	80.5	107.2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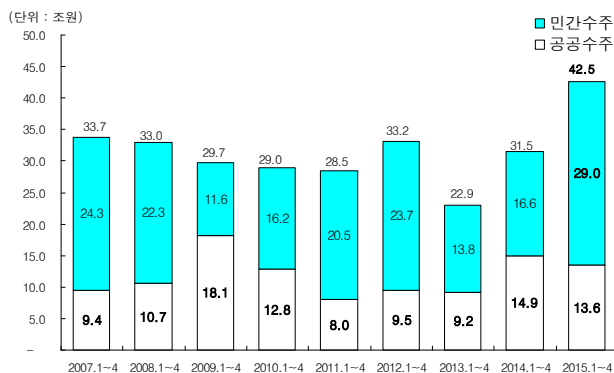
자료 : 대한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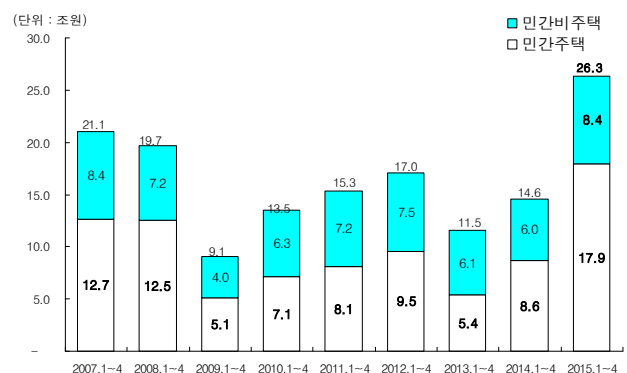
■ 1~4월 건설수주 회복은 민간 건축수주 회복에 기인

- 1~4월 동안 공공수주는 전년 동기비 9.0% 감소한 13.6조원을 기록함.
  - 1~4월 공공 토목수주는 도로 수주의 부진으로 8.6% 감소한 10.3조원에 그침.
  - 공공 주택수주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12.5% 증가한 0.8조원을 기록함. 그러나, 비주택 건축수주가 전년 대비 15.6% 감소한 2.5조원에 그치며 부진하였음.
- 민간수주는 모든 공종이 양호했는데, 특히 건축수주가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기비 74.9% 증가한 29.0조원으로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
  - 1~4월 민간 토목수주는 기저효과로 34.0% 증가한 2.6조원을 기록함.
  - 민간 주택수주는 신규주택 수주 증가뿐만 아니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수주 회복의 영향으로 1~4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7.9조원을 기록, 107.2% 급등함.
  - 비주택 건축수주 또한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인 8.4조원을 기록해 41.6% 증가함.
- 결과적으로 2015년 1~4월 건설수주 회복은 민간 건축수주 회복에 기인함.
  - 1~4월 민간 건축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주의 61.9%에 달함.
  - 특히, 민간 주택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42.5% 이후 9년 만의 최대치인 42.1%로 민간 주택수주가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짐.
  - 최근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오피스를 비롯한 상업용 건물투자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1~4월 전체(공공 및 민간) 수주 비교>



<연도별 1~4월 민간 건축수주 비교>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6. 4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재정성과과 주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외환건전성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안) 등 논의</li> </ul>
6. 5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정책국 주최,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li> <li>-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의견 조정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정책과 주최,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ul>
6. 9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정책과 주최, ‘노후건축물 리뉴얼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li> <li>-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논의</li> </ul>

■ 「글로벌 건설시장 전망과 해외건설의 건설성장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6. 25(목) 14:00~16:30,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해외건설협회
- 발표 주제
  - 제1주제 :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발제자 : 최중석 해외건설협회 박사)
  - 제2주제 : 글로벌 건설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건설기업 성장전략  
(발제자 :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3주제 : 해외건설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지수 도입 방안  
(발제자 :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6. 30(화) 14:00~17:00,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발표 주제
  - 제1주제 : 2015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발제자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2015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발제자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야구의 2군과 해외건설

국내 프로야구에는 주전이 되고자 열심히 땀을 흘리는 ‘2군 선수’들을 모아둔 ‘퓨처스리그(마이너리그)’가 있다. 본래 야구라는 것이 9명의 베스트 멤버로 구성된 팀 간 대항전이지만 1년에 144게임이나 해야 하는 장기전이기에 때문에 1군 선수들이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해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팀의 전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2군 선수들이 필요하다. ‘1군 같은’ 2군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체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런 투자를 지속하는 구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해외건설도 다르지 않다. 지난 1965년 해외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3개사였던 진출업체 수는 2014년 기준으로 332개사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건수도 5건에서 1,773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0년에는 186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는가 하면 최근 5년 연평균 수주 규모는 650억 달러를 상회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가 단지 몇몇 대형 건설기업에게 의존한 결과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규모의 상당 비중을 상위 10개 건설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해외건설시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하지만 우리 해외건설은 일부 기업들의 수주 비중이 높은 것 외에도 일부 시장과 공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주구조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기업과 중소 건설기업 간의 해외수주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지만 중소 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조차 어려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중소건설기업의 수주확대뿐만이 아니라 시장과 공종을 다양하게 하고 대형 건설기업에 대한 비대한 의존도를 줄여 지속가능하면서도 균형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2군 투자가 절실하다. 그 중심에 정부의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건설기업들도 수주 중심의 단기적 시장 접근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투자를 기반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해외건설시장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1군 선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의 건설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을 했다.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우리에게 ‘1군 같은 2군’이 필요하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 2015. 6. 10>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